

이슈파워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해진술 함부로 배척 안돼”

대법 “피해진술 일관되고 허위진술할 동기 안드러나”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26일 오전 1시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영영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최씨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최씨는 구속된 지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최씨도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심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합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합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최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전까지 옛날로 돌아간 ‘실내 롤러장’

소비자원 접수된 사고 97.7%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책임 이용자에게 전가”

복고열풍 영향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전국에 300여개가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중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31건 접수됐으며, 그 중 97.7%는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였다.

그러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의 안전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조사대상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 중 8개소(40.0%)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역주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대부분(19개소, 95%) 업소에서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거나(11개소, 55.0%) 전용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13개소, 65.0%)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은 화재 발

생에 대비한 소화기·화재경보기·비상조명등·피난안내도 설치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대어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안전모·보호장구는 안전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환경에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들 역시 안전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 중 328명(69.8%)이 안전모를, 240명(51.1%)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하는 업소도 없었다.

문제는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10곳 중 8곳(20개 중 16개소, 80%)은 안전수칙 미준수·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후 피해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현재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체육시설업 분류, 보험가입 등)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정 가득 따뜻한 점심 한 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며 기온이 뚝 떨어지던 12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사랑해 밥차’ 무료급식소에서 봉사자들이 온정을 담아 따뜻한 밥과 국으로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 이날 500여명이 이곳에서 점심 한 끼를 해결했다.



참여연대가 5G 이용자 7명과 함께 ‘먹통 5G’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세계 최초 5G라고 홍보 하더니” 이용자 7명 ‘먹통 5G’ 분쟁조정 신청

“연내 23만개 기지국 구축 계획 불구 현재 9만개 불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실제로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이용자 7명과 함께 ‘먹통 5G’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용화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미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연내 23만개의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9월 기준, 기지국 숫자는 9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와 과기부는 이런 불안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기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결과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 7명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한 커버리지맵 서비스 제공지역에서 막상 5G가 안터지고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는 통신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7명의 소비자는 SKT 3명, KT 3명, LGU+ 1명이었고 주 사용지역은 수도권이었다.

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순도로 사용하라’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5G서비스가 안정화할 때까지 LTE수준으로 1만~2만원의 요금을 인하고 위약금 없이 가입을 해주시길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구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잠정기간이 운영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서울시 1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